社 說

질적 성장의 표징, 재도약의 발판삼아야

—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우수학과'선정

지난 3월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2학년도 대학학과평가인정제' 결과 발표에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물리학과와 수원캠퍼스 물리학과, 전자공학과를 '교육여건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제껏 대학자체평가, 적·간접 비교평가는 많이 있어 왔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실시한 공식적인 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무척 고무적이며, 중정적인 사실이다. 선정과정과 현실적인 우리대학 교육여건들을 차치하고 보면 재학생, 동문, 교수, 교직원 등 모든 '경희인'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학교는 올해로 개교 44주년을 맞는다. 6년 후인 99년에는 우리나라 대학역사로는 결코 짧지 않은 개교 50주년, 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희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임은 틀림없다.

더욱 기쁜 사실은 79년 현 공과대학건물 하나만으로 시작한 수원캠퍼스가 현재 6개 단대와 재학생 1만여명, 외형상으로 양적팽창을 거듭하고 내실을 다지기엔 다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모두 '우수학과' 판정을 받은 사실은 그동안 '압축성장'을 거듭해온 결과로 보여져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들 두 과가 평가기준인 학과목표 및 교육과정, 시설·설비 경영 및 재정 등 6개 기준에서 고루 우수한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교협은 평가결과에서 밝혔듯이 대부분 대학들이 실험기자재, 실험실공간 및 조교의 부족으로 충분한 실험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립대학의 재정이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재단전입금이나 외부기부금 유치노력이 미흡함을 들어 아직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우리학교도 예외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가 아닌가 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올해의 평가대상학과는 화학과와 기계공학과 등이다. 이번에도 '우수학과'로 선정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의 계기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장·단기발전계획안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된다면 평가결과를 예상함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가대상학과의 단순한 평가를 위한 평가만을 준비할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평가의 기본 목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를 인식하고 준비할 때가 아닌가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확충과 행정지원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약속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기회가 진정한 경희발전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에 전 경희인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대외적인 우리학교 위상강화와 외부기부금확충 등으로 21세기를 여는 차분한 준비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군위안부, 실질적인 대책이 아쉽다

— 정부의 '…구호조치' 발표에 부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에 대한 정부의 '군대 위안부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난 달 29일 확정 발표되었다. 정부의 이런 구호 조치는 뼈아픈 일제 침탈 역사의 상흔으로 국내에 생존해 있는 1백40여명의 군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의 배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이런 외무부의 발표는 군위안부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라는 의의보다는 일본을 향한 새정부의 대(對)일본 메시지 표명의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

우리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를 구실로 일본측에 역사적 피해를 돈으로 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의지를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지침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는 대일본 정책의 의미가 들어 있어 '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조치'는 한·일관계에 있어 상당한 함수작용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

지난 1월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이후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와 함께 한·일간에 최대의 쟁점이 되어온 군대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는 '과거사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나라'라는 식의 논의를 전개, 기금마련을 운운했으며, 군대위안부 설치 및 운영과정에 일본정부의 개입은 인정되나 모집과정에서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외무부는 일본의 논의전개에 쐐기를 박기 위해 이번 발표를 통하여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한국민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군대 위안부 전모에 대한 조사노력의 지속, 이를 일본 스스로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려는 실천적인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는 한일의 과거사 규명 노력은 이제 더이상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당위의 명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에게는 새정부의 방침에 따른 압력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승주 외무장관과 와타나베 일본 외무장관의 회담을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짙게 든다. 정부측이 국제적인 대일관계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번 구호조처가 거창한 국가적 의의의 차원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구호내용은 애초 계획과는 달리 생활기본금(일시지원) 5백만원, 매월 1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의료무료혜택, 월 5만6천원씩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가능한의 지원 등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대일본 보상청구, 국제적 인권위 제소 등은 이 조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국 외교적인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물질적인 배상요구는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발표한 이번 구호조처는 대일본적인 효과를 노린 모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출판 매체비평

중복출판에 멍드는 독서풍토

"어린왕자" 60여종 출판, 파지 전락 1천5백억이나

최근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우리 출판계의 중복출판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미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누누이 지적된 일이지만 또다시 그 결과를 대하는 심정은 여전히 답답할 따름이다.

출판은 양면성을 지닌 산업이다. 그 생산물인 책에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보존, 그리고 전승이라는 기능이 있기에 문화성이 강한 반면, 생산의 주체인 출판사는 엄연한 기업인 까닭에 운영에 필요한 자본, 즉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영리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출판인은 영리추구를 위한 영업활동과 함께 '문화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적절히 조화시켜 궁극적으로 독자들의 문화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언제부터 출판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남이 애써 개발해 놓은 책들을 마구 베껴먹는 것도 서슴지 않는 풍토가 그 한 예이다.

실상이 이러할진대 '책의 해'라는 거창한 문구는 물론, 잠재독자들의 발길을 서점으로 유도하는 일도,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일도 모두 무책임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것들만을 골라 재탕하다 보니 쌍쌍쥐페리의 "어린왕자"같은 경우 무려 63개 출판사에서 중복출판한 것을 비롯, 10개 이상의 출판사가 중복출판한 책만 해도 50여권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참신하고 획기적인 저작물을 기획할 만한 여력이 없는 출판사가 많다. 또한 불특정다수로만 정의되는 독자층의 입맛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호평을 받은 책들을 재탕해서라도 최소한의 운영은 해야한다는 고충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악조건 속에서 열악함을 무릅쓰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소신있는 출판사들이 본의아니게 감수해야하는 치명적인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출판사 이름만 다른 똑같은 책들이 널려있는 진열대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독자들의 허망함은 또한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게다가 중복출판, 유사출판으로 대표되는 마구잡이 출판으로 인해 독자들의 손에 가기도 전에 파지가 되고 마는 책이 한해 동안 어림잡아 1천5백억원어치나 된다고 하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찾지 않는 국민성을 탓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풍토를 만들려는 출판인들의 노력이 더 시급하다. 남이 애써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달랑 들고 덤벼드는 몰염치한 작태가 '책의 해'를 꾸려가는 출판계에서만은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 기 태
〈서울편집디자인스쿨전임강사〉

'고통분담' 허울 쓴 임금통제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대안

사론

지난 3월 24일 한국경총 이동찬회장은 경총회원 기업인 3백57개 주요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을 동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의 이러한 일방적인 발표는 현재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고통분담을 내세우며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임금억제정책이 민간기업에서도 그대로 시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며, 올해 노동계의 임금협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총의 이 발표는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억제정책의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재계는 총액임금제의 실시를 통하여 임금을 5%이내로 억제하고 성과급중심의 임금체계로 임금구조를 개편하고자 추진해왔으며, 올해에도 강력히 임금억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즉 올해에는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은 총액기준 3%이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독과점업체, 금융기관 및 기타 고임금업종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여신규제와 금융규제를 하고 이를 지킬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임금억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지난 3월 19일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 특별담화 직후에 취해진 '공무원 임금동결'과 '대기업 과장급 이상의 임금동결선언'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위에서 소위 '신한국건설'을 하겠다는 극단적인 조치로서 이는 심각한 사회분쟁을 야기시킬 것이다.

우선 과장급이상 임금동결조장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선행조치도 없이 경제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부담을 노동자쪽에 통째로 떠넘기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김영삼 정권의 등장이후 신경제정책과 '신경제 1백일계획'을 등에 업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의 분담을 넘어서 고통의 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함께 신경제구상이나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에 각종 지원과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6일에 있었던 금리인하조치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서민에게는 물가인상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1.26금리인하조치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서민에게는 물가인상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또한 임금은 국민경제에서 총수요의 기반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파악하여 임금동결조치를 취한 것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성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로 경총의 임금동결주장은 현실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자율적인 노사임금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경총회장의 발표 이후인 지난 27일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회의에서 과장급이상 임금동결방침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체마다 과장급이상의 직무나 직급, 임금체계, 임금결정방식 등이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임금동결을 시행할 경우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이다. 또한 결으로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내세우면서도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이를 더디구하고 대통령선거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실명제를 연기하면서까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임금동결을 들고 나온 것은 형평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아니라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려는 전횡 이다.

둘째로 실질임금의 삭감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원리에 비추어서도 허황되기에 짝이 없으며, 노동자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임금 동결선언은 비민주적 발상의 전형이다.

또한 임금은 국민경제에서 총수요의 기반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파악하여 임금동결조치를 취한 것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성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로 경총의 임금동결주장은 현실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자율적인 노사임금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경총회장의 발표 이후인 지난 27일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회의에서 과장급이상 임금동결방침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체마다 과장급이상의 직무나 직급, 임금체계, 임금결정방식 등이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임금동결을 시행할 경우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이다. 또한 결으로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내세우면서도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이를 더욱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노사간의 자율교섭권을 말살하는 것으로 노사관계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다.

우선 경총의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는 노총을 압박하여 경총과 노총의 임금협상에서 노총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경총의 의도대로 한자리수 임금인상에 굴복하게 만들었다. 즉 지난 2월초부터 계속된 임금협상과정의 중도에서 나온 경총의 '대기업 과장급이상 임금동결조치'는 정부와 재계가 힘을 통해 임금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마침내 93년 임금인상을 통상임금기준으로 최저 4.7%에서 최고 8.9% 범위내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4월1일).

그리고 올해에는 임금협상과 정에서 기업들의 눈치보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이면타결 등이 나타나면서 임금구조의 왜곡이 가속화되고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총액임금제의 실시과정에서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각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임금협상을 지연지체시켰던 것처럼 올해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 임금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구조면에서도 각종 수당의 신설이나 이면타결등과 같은 편법인상이 생겨나 그렇지 않아도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수당등이 더욱 늘어나는 등 임금체계가 더욱 왜곡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무차별적인 임금동결이나 임금억제조치는 최저생계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제조업노동자들의 저항과 정부 및 재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하게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진영은 물론이고 노총내에 몇개 연맹조차 노총과 경총의 한자리수 임금타결을 무효로 선언하고 이후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경총의 이번 임금동결조치는 노동자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남 승 우
〈구로노동연구소 교육실장〉

기업엔 특혜, 노동자에겐 임금억제

금융실명제등 근본해결책 회피해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 삼성

삼성이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SAMSUNG

5
제2창업5주년

1938년 창업 이후, 끝없는 도전과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기업, 세계기업으로 성장해온 삼성—

삼성이 제2창업 5주년을 맞아 새로워진 얼굴과
새로운 각오로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한
힘찬 웅비를 시작합니다.

21세기를 불과 7년 앞둔 지금,
삼성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21세기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영이념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삼성인의 정신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에 도전하겠습니다.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SAMSUNG 삼성